

3차 북핵위기 분석과 정책제언

코리아연구원1)

- I. 위기의 한반도 정세
- II. 3차 북핵위기와 북한의 의도 분석
- III.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정책 평가와 전망
- IV.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 평가
- V. 3차 북핵위기의 시나리오와 정책제언

I. 위기의 한반도 정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운반로켓트 ‘은하2호’ 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 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고 4월 5일 보도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4월 14일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 제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제재대상 단체 및 물자 지정을 통해 조정하기로 합의” 하여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였다.

이에 북한은 5월 25일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또 한 차례의 지하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고 2차 핵실험 사실을 발표했다. 다시 유엔안보리는 6월 12일 “1718호 8항 (a)호의 (제재)조치들이 소형무기와 관련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의 공급, 제조, 정비,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decide)한다…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 11, 12항에 따른 검색에 협조하여야 하고, 만일 기국이 공해상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국은 해당 선박을 적절하고 편리한 항구로 유도하여, 현지 당국이 11항에 따른 필요한 검색을 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며 매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시 북한은 6월 13일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를 단호히 규탄배격하며,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 둘째,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한다.” 고 선언하였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6월 16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을 채택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확장된 억제력’의 명문화는 결국 우리의 핵억제력 보유의 명분을 더 당당히 해줄 뿐이며 ‘유사시’ 우리의 핵보복의 불소나기가 남조선에까지 들쭉거리게 하는 참혹한 사태를 자초하는 것으로 될 뿐이다.”며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한반도정세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위기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면 현 정세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이후 후계 체계 구축 및 체제 결속을 목적으로 핵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북한의 내부적 요인 때문인가? 또는 오바마 행정부와 양자협상을 위해 몸값을 부풀리고 판돈을 키우기 위한 협상용으로 ‘핵 폐기를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의 길 대신에 ‘관계정상화 이후 핵무기 폐기’의 길로 가기 위한 기선잡기인가? 아니면 2012년 강성대국의 장기구상에 따른 준비되고 계획된 행보인가? 북한의 의도를 주관적이고 즉자적으로 평가할 경우 잘못된 정책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북한의 의도와 구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경우, 위기를 안정적으로 연착륙시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II. 3차 북핵위기와 북한의 의도 분석

1) 3차 북핵위기 분석

북한은 왜 1,2차 북핵위기와 달리 현재의 국면을 공세적으로 만들고 주도하고 있는 것일까? 과거 1,2차 북핵위기는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압박하면, 북한이 정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위기로 발전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3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는 과정의 초기에 북한은 로켓(인공위성) 발사를 국제해사기구 등에 통보하고, “위성은 우주의 평화적리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은 유엔안보리가 비교적 강경한 의장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맞대응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더구나 “핵보유국이 핵 시험을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으며 너무도 응당하다”며 주장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1,2차 북핵위기 때와 달리 북한의 입장이 ‘핵실험 단계’에서 ‘핵무기 보유단계’로 바뀐 상황이므로, 이번 위기는 1,2차 위기와 다른 3차 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1,2차 북핵위기의 해법으로는 북한의 핵능력을 동결시키는 것과 북한의 안보우려를 맞교환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 과정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동시이행 과정을 거쳐서 핵폐기를 통한 관계정상화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부시 정부 들어 사문화된 제네바합의 이후 2007년의 2·13합의까지의 과정은 먼 길을 돌고 돌아 북한의 핵실험을 통한 핵능력 배가와 사실상 핵무기 보유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다음의 합의였다.

<1~3차 북핵 위기 비교표>

	1차 북핵위기	2차 북핵위기	3차 북핵위기
위기 발단	IAEA, 특별사찰 요구(1993.2)/ 북한, NPT 탈퇴선언(93.3.12)	미국, "북, 핵개발 계획 시인" 발표(2002.10.17)	로켓(인공위성) 발사(2009.4.5) 및 2차 핵실험(5.25)
핵개발 양태	플루토늄 추출 위한 핵연료봉 재처리	고농축우라늄(HEU) 의혹 제기	2차 지하 핵실험
회담 형식	북미 양자회담	6자회담	?
위기 해법	핵개발 동결(경수로 2기와 중유 제공)	북핵폐기 및 관계정상화, 경제협력(에너지 지원), 평화체제 등 상응조치 합의	?
종 결	제네바합의(1994.10.21)	9.19공동성명(2005.9.19) 및 2.13합의(2007.2.13)	?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등장 이후 대북정책 검토가 지연되는 사이 북한은 로켓발사와 핵실험의 공세를 펼쳤다. 이후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대응해 9·19공동성명에 담긴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이 없는 6자회담은 필요없다” 고 선언하였다. 이는 6자회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2·13합의 및 10·3합의의 무효화까지도 의미한다. 나아가 북한은 추가적인 핵 및 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여, 6자회담 차원을 넘어 새판을 짜고 협상내용도 바뀌 미국과의 전면적인 관계정상화를 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미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노리는 구상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의 2012년 구상과 국방위원회 분석

한편 우리 정부는 3차 북핵위기 원인에 대해 내부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 중 북한의 내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6월 4일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이 뇌졸중을 앓지 않았다면 후계문제가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신속하게 제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김 위원장이 불확실한 ‘정권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외부로 향한 도발 및 내부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6월 13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야망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정일가의 후계 유지 강화에 있다” 라고 말했다.

이른바 북한붕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1994년 김일성 사후 3일 이내에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체제에 대한 무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계기로 유고 또는 급변사태를 주장하며 희망사항의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지 않았고, ‘고난의 행군’도 버텼다. 북한체제에서 수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주목해야 할 사실은 북한체제가 수령-당-대중의 통치체계, 즉 당적지도를 통해 내각과 각계각층의 단위(인전대) 그리고 대중을 통치하는 체제라는 점이다.

특히 지난 4월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위원장을 2명에서 3명으로, 위원을 4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군 인사로 분류되는 6명 외에 당간부들을 국방위원으로 임명한 점 또한 이례적인 조치다.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격상시켰다. 즉, 향후 위기시기를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후계체제는 국방위원회의 후견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3차 북핵위기는 북한이 주장하는 사상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경제강국의 기초를 놓는 2012년 강성대국 구상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경제강국의 기초를 만들자면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경제봉쇄를 해제하고 한반도평화체제가 담보돼야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은 비확산과 비핵화라는 2단계 전략으로 선회하고, 비핵화 이전까지 핵전력화의 가속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제결속을 피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 공세를 계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Ⅲ.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정책 평가와 전망

1)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공약 분석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우스다코타 기자회견담회에서 “나는 우리의 동맹국과 친구뿐 아니라 시리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같은 우리의 적들과도 강력한 외교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나는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며 준비는 하되 조건은 없이 만날 것이다. 나는 이들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할 것이다.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게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졌고 (그제야) 대화를 해야만 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6자회담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진전을 이뤄냈고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를) 내려놓게 했다.” 며 부시 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9·19와 2·13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아래 표에서 보듯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불량국가로 낙인찍혔던 국가들과도 직접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정책 공약은 “북한과의 공세적이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6자회담을 보완하면서 북한 비핵화과정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6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은 카이로대학 연설에서 “미국과 전 세계 무슬림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와 안보 속에 공

존할 수 있는 두 국가를 건설하여 양측의 열망을 실현하는 것” 이라고 선언했다. 이 연설은 아직 말의 단계이지만 이제까지의 미국의 중동정책 및 대외정책과는 확연히 변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서 향후 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표> 오바마행정부의 주요 대외정책²⁾

분야	주요 정책
외교안보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월 내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하고, 테러와의 전쟁 승리를 위해 아프간 및 파키스탄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추구 - 이란 핵문제를 고위급 직접협상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등 테러집단, 불량국가로부터 핵 안전을 확보 - 국제테러망을 분쇄하기 위한 새로운 연합체로서 공유된 안보동반자프로그램(SSPP) 창설 및 2012년까지 대외원조액 500억 달러 배증, 실패국가 지원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아시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등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인도와 같은 생동감 있는 민주주의 파트너와의 관계 심화 - 중국과는 분야별로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 - 지역안정의 증진과 초국가위협에 맞서기 위해 아시아집단안보체제를 창출
한반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동맹의 강화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 으로 인식 - 한미FTA 발효를 위해 자동차 문제에 대한 추가협상이 필요 - 북한과의 조건 없는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 추진 - 김증을 통한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추구 -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에 반대하며 국제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

2)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정책 분석 및 전망

오바마 정부는 아직 한반도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부 내부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정책충돌 또는 정책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종의 과도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과도기의 현상을 살펴보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월 19일 서울행 기내에서 “북한이 후계문제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고 발언했다. 이는 진지한 북미대화를 준비하는 외교수장으로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한 모습이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보스워스 대북특별대표는 6월 9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만찬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침공이나 무력을 통한 정권교체 의도가 전혀 없으며, 협상과 대화만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확신” 한다는 극히 원론적 수준의 발언만을 하였다.

또한 6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을 주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한미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 분쟁 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원조에 있어서 공조를 제고” 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었는데, 이는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이라는 미국의 요구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 보장이라는 한국의 요구가 교환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북한의 2차 지하 핵실험 후의 상황논리에 따른 오바마 정부 정책의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이런 오바마 정부의 정책적 과도기를 활용하여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 직접협상을 통해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이를 추인하고 집행하는 실무회담 틀로 6자회담을 격하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와 오바마 정부의 과도기의 관성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며 북한의 강공을 애써 무시하고,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대화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대선 당시와 집권 이후의 외교안보라인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은근한 무시론’ 과 ‘전략적 관리론’ (핵 비확산, 북한 붕괴방지를 위해 전략적 북한관리를 위해 북미 직접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경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근한 무시론’ 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아질 경우, 앞으로는 커트 캠벨의 ‘전략적 관리론’ 이 우세해질 가능성이 높다.

IV.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 평가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 ‘유사시’ 우리의 핵보복의 불소나기가 남조선에까지 들쭉거리게 하는 참혹한 사태를 자초하는 것” 이라고 위협했다. 그야말로 한반도는 1994년을 능가하는 위기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는 듯하다. 1994년의 위기는 북미 간 전쟁위기였다면 현재의 위기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및 확산 가능성에 북미 간 긴장까지 고조되는 매우 엄중한 위기다.

위기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를 풀기보다는 대북강경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른바 ‘액션플랜 없는 대북정책’ 때문이다. ‘비핵·개방 3000구상’ 이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은 북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규율할 처방이 결여된 ‘근본주의적’ 정책이다. 즉,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의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실행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1단계의 실행가능한 정책들조차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기념비적 성과물인 6·15와 10·4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하기보다는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만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행보로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퇴행시켰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다져온 남북 간 신뢰와 대화의 끈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끊기고 말았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폐쇄위기에 놓여있다. 그리고 PSI 전면참여 선언 및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 명시로 기존의 남북합의들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이처럼 신뢰가 사라진 남북관계는 향후 6.15 및 10.4선언의 구체적인 실천 없이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는 복원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 큰 문제는 향후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전개될 북미 간 대화국면에서 소외되고 통미봉남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2)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평가

지난 6월 16일 열린 한미정상회담³⁾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렸기 때문에 한국 주도의 강경분위기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이 주장하는 스마트파워외교와도 거리가 있다. 초기부터 하드파워 위주의 처방이 나왔고, 소프트파워에 대한 비전들이 담겨있지 않다. 이것은 북한이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공세적인 강경책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하드파워적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또 하나는 한국정부가 대북강경책을 고수한 가운데 미국은 대북정책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경한 대북입장을 담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11월 17일 부시-노무현 대통령의 한미공동선언과 2008년에 부시-이명박 대통령 간에 합의했던 내용들이 다시 수록되는 수준이다. 그리고 청와대도 전작권 환수의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핵우산의 확장억지 문제의 경우, 이미 1978년부터 시작된 것을 정치적인 효과를 위해 명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핵우산의 확장억제개념은 오히려 북한이 주장하는 핵군축협상의 정당성을 마련해주어, 향후 북-미간 군축회담이나 핵폐기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6월 28일 이명박대통령과 아소 타로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 참석 5개국에 단합되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이 일치”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정상회담 때 “한·미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협력해서 북한 핵을 확실하게 폐기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한다는 발언의 재판이다. 즉, 이명박 정부는 5자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기투향을 압박하는 맞대응으로 위기고조의 길로 나가는 것

이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시점에 상하이협력기구(SCO)가 폐막하면서 채택한 ‘예카테린부르크 선언’은 “북핵 6자회담 재개 지지 및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의 회원국들의 결속 강화” 등을 담았다. 이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5자협의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불참한 북한제재의 한계가 노출될 경우, 미국이 커트 캠벨의 ‘전략적 관리론’에 입각한 대북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반기로 다가온 일본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일본의 대북정책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1874호’에 고무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5자협의’를 밀어붙인 ‘과잉행위’에 대해 성찰하고 대북정책의 전환을 준비할 때다.

V. 3차 북핵위기의 시나리오와 정책제언

1) 3차 북핵위기의 시나리오와 전망

오바마 정부는 ‘은근한 무시론’으로 제3차 북핵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언제까지 ‘은근한 무시론’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행보를 좌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유엔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ICBM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6자회담은 존재이유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북한이 노리는 북미 간 핵감축을 위한 회담구조가 만들어지기까지 3차 북핵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3차 북핵위기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반도의 위기가 전쟁 일보직전의 1994년의 위기수준까지 증폭되는 경우이다. 북한과 미국이 현재의 입장 차이를 견지한 채 군사적 충돌을 고려하게 될 경우, 동북아의 긴장은 매우 높아질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둘째는 미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대북제재의 모양을 갖춘 뒤 북미대화에 나서는 경우인데, 미국의 국내 상황과 현 상태의 대북정책 결정구조로는 ‘제재’에서 ‘대화’로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억류 여기자 석방을 위한 북미대화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있다.

셋째는 중국의 중재로 9.19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으로 북한과 미국이 복귀하여, 미국과 북한이 나뉠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양자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

하고 있어 국제공조와 더불어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조건없이 6자회담과 남북대화에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중국이 대북제재와 압박에 실제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자국이 뒤집어쓰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는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의 상황을 판단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시나리오들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상황은 더 엄중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의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미국의 군사제재 가능성과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도 가능하지 않고, 미국의 ‘은근한 무시전략’도 해법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북미간의 합의 가능한 방안은 인도모델⁴⁾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미국의 대답에 협상의 여부 및 결과가 달려있다. 현재 북한은 이미 생산해서 무기화한 핵물질을 폐기하는 것, 즉 핵무기 폐기의 조건으로 미국에게 대북 적대시정책 종료, 핵우산 제거, 한국과의 동맹 종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연 커트 캠벨이 어떤 답을 북한에 제시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보적 이해관계는 핵물질 추가생산, ICBM, 노동미사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핵탄두 등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 미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핵물질 추가생산(비확산 관련), ICBM(미국본토 공격 위협)이고, 나머지는 동맹국의 안보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직결된 두 가지만을 가지고도 북한과 협상하여 북미관계를 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과 한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하반기에 있을 일본 총선의 결과도 매우 중요하다. 이제까지는 한-미-일 공동행동이 가능했는데,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이제까지의 한-미-일의 공동대응의 입장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과거 전략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정상화 추구였다. 그러나 지금은 핵 억지력을 확보한 후에 관계정상화를 요구함으로써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접점으로 북미 간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3차 북핵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9월초 즈음에 북미대화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지렛대와 추진동력을 스스로 배제한 만큼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대신 미-중-일의 행보에 피동적으로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3차 북핵위기 해법을 위한 정책제언

북한의 로켓(인공위성)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3차 북핵위기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

조되고 있다. 이 위기국면에서 핵실험에는 핵우산의 확장역지로, 제재엔 도발로, 도발에는 보복타격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을 지혜롭게 풀지 않는다면 민족적 재앙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3차 북핵위기의 해결에서도 남·북간 군사대결이나 미국의 북폭 방식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6자회담을 대체하는 5자협의 방식이 아닌 북미 간 관계정상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뒤덮기 시작한 재앙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코리아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북한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남북 간 군사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북미 간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협상을 통해 3차 북핵위기를 매듭짓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6·15와 10·4선언을 존중하는 전면적 정책전환에 나서야 하며, 군사적 충돌 및 국지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6자회담을 대체하는 5자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기향복을 압박하는 것은 실현여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만 우려되므로,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와 2·13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2009/07/03)



※코리아연구원은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회비 및 기부금으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와 전화(02-733-3348)로 후원 및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주>

- 1) 6월 19일 열린 비공개 전문가좌담회 논의를 토대로 작성한 코리아연구원 정책제안서입니다.
- 2) 2008년 11월 11일 발표된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24-2호 “미국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반도” 원고 참조.
- 3)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145호 “한미정상회담의 특징과 평가”(2009. 6. 19)를 참조(<http://knsi.org/~knsiorg/knsi/kor/center/view.php?no=9146&c=1&m=7>)
- 4) 추가적인 핵물질 생산을 못하게 하는 것(영변원자로의 불능화, 해체), 추가 핵실험 금지, 핵물질·핵기술 비확산 약속으로, 2005년 미국-인도 간 원자력협정을 맺으면서 인도총리가 약속한 것으로, 북한은 2007년 미국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